
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(안)

2020. 3.

기 획 재 정 부

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
(안)

2
0
2
0
·
3
·

기
획
재
정
부

순 서

[제1편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]

- I.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3
- II.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5

[제2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]

- I. 기금운용 여건 31
- II.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32

제1편

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

I

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

1

경제·사회 여건

□ (경제여건) 내년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, 불확실성도 상존

-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가운데, 각국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 반등 전망
 - 다만, 금융시장 불안, 유가하락에 따른 자원 의존 신흥국들의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 상존
- 국내경제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소비·투자 등 회복이 예상되나,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
□ (민생여건)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·소득 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

-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·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
- 플랫폼 노동자, 일용직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,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·의료·돌봄 등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
-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보강 및 고도화, 필수 보건 비축물자 확충, ICT 기반 의료·교육·근로 인프라 보강 필요

□ (구조적 여건) 4차 산업혁명 및 인구 구조변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우리경제·사회의 구조혁신·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필요

- DNA(데이터·5G·AI) 기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,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가시적 성과 도출·확산이 시급
-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·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, 혁신인재 양성,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노동생산성 제고 필요

⇒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함께 당면한 정책현안 해결, 혁신적 포용성장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필요

2

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

□ (재정여건) 금년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,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

- (세입)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불확실성도 확대될 우려
- (세출)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소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소요도 추가될 전망
- (재정건전성)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필요

□ (기본방향) 「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」와 함께 「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」 병행

- (재정기조)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 성장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
 -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
- (투자중점) 내수·수출·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
 - 생계·교육·고용·주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사회안전망 보강, 저소득·취약계층의 일자리·소득 확충 등으로 포용가치 확산 뒷받침
 -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제규모에 걸맞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안전·환경·국방 분야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
- (재정혁신) 세출 전반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다부처 협업 예산 도입 등을 통한 재정운용시스템 혁신
 -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% 의무감축, 관행적 보조금·출연금 전면 정비, 집행실적·성과 부진 사업의 과감한 예산 감축 등 추진
 -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, 공동으로 사업기획·예산 요구하고 공동사업단 운영 등으로 사업집행·평가를 통합 관리

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·포용 체감성과 확산

기본방향

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+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

4
대
투
자
중
점

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

- 자영업·소상공인 재기·혁신 지원
- 글로벌 수출·생산 네트워크 다변화
- 맞춤형 투자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
- 한류기반 글로벌 관광 인프라 확충

미래를 여는 혁신성장

-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먹거리 육성
- 혁신·벤처창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
-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제조업 혁신
- R&D·인력·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

함께 누리는 포용사회

- 플랫폼노동자·일용직 고용안전망 확충
- 청년·여성·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
- 생계·교육·주거사회안전망 확충
- 출산·보육·돌봄 서비스 업그레이드

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

-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
- 교통·산재·재해 안전인프라 확대
- 첨단 무기체계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
- 신남방·신북방 평화외교 확장

미래 신산업, 맞춤형 고용안전망, 자영업·소상공인 재기·혁신 등
「핵심투자 프로젝트」에 재원을 집중 배분

재정혁신 3대전략 10대과제

과감한 지출 구조조정

- 전략적재원배분
- 재량지출10% 의무적구조조정
- 보조금·출연금등 전면 정비

지속가능 기반 확충

- 세입기반 확충·효율적재원활용
- 집행실적·성과기반 예산 편성
- 재정사업 전달체계 개선
-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

혁신적 재정운용 틀 확립

- 협업예산편성 제도화
- 예산사업 분류 및 비목 체계개편
- 재정운영의 참여·공개 확대

□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역동성 강화

- 자영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준비된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고,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·스마트상점 등 新유통 인프라 지원
-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,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유통, 신북방·신남방 수출시장·생산기지 개척 지원 확대
-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,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관광·쇼핑·체험을 통합·연계하는 ‘코리아 토탈관광패키지’ 도입
- 혁신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원
-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, 노후 기반시설 개량, 생활SOC 및 스마트 교통·치안·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

□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혁신성장 가속화

- 바이오·미래차·시스템반도체·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을 DNA(데이터·5G·AI) 기반 기술과 접목하여 고도화
- 혁신기술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도약(scale-up)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R&D·사업화·자금 등 패키지 지원
- 공장·산단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, 농어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팜·양식 클러스터 조기 구축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&D·실증인프라·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
- 혁신 기술·산업에 대한 도전적 R&D·모험자본 투자·정부조달을 확대하고, AI 등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 인프라 보강
- ICT 기반의 의료·교육·근로·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

□ **촉촉한 사회안전망으로 포용가치 확산**

- 플랫폼 노동자·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고, 청년·40대·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
-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, 국민취업지원제도·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,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등 생계·고용·교육·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
- 장애인, 여성·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·다문화가정,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·돌봄·자립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선
-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·주거·보육·일가정 양립지원 등 체감형 패키지 투자 확대
-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, 노인 일자리 내실화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
- 사회적 약자 보호, 기회균등, 공동체, 안전,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
□ **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삶의 질 제고**

- 감염병 전문병원·인력 확충,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 전략적 확보, 백신·치료제 R&D 확대 등 방역·치료 시스템 고도화
- 노후 경유차 감축 등 핵심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대하고, 녹색 벤처기업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
-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등 생활 주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, 풍수해·화재 등 대형·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제고
- 핵·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·도입, 가상·증강현실 기반 훈련프로그램 확충 등 스마트 군 역량 제고
- 전략지역 대상 공공외교 및 신남방·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ODA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사건·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강화
-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, 남북 협력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등에 중점 지원

핵심투자 프로젝트 [예시]

국민들이 확실한 변화·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
「핵심투자 프로젝트」에 재원을 집중배분

【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】

① 자영업·소상공인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

▶ 스마트 상점·온라인 판로 + 스마트 창업 기술교육 + AI 상권분석 등 준비된 창업

② 글로벌 수출·생산 리스크 대응 패키지

▶ 100대 소재·부품·장비 자립화 + 수출시장·생산기반 다변화 + 스마트 제조혁신

③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 스마트화

▶ 광역교통망 + 원스톱 디지털 정부혁신 + 스마트 교통·치안·상하수도·보건 시스템

④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

▶ 한류 문화콘텐츠 개발 + 지방공항 중심으로 관광·쇼핑·체험 연계 패키지

【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】

⑤ Post 반도체, AI+X 등 미래신산업 프로젝트

▶ 바이오헬스·미래차·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생태계 + R&D·인력·금융 맞춤형 공급

⑥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

▶ 벤처창업 기업의 스케일업 + 글로벌 유니콘·데카콘 기업 발굴 육성

【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】

⑦ 미래 수요 맞춤형 고용안전망

▶ 신기술 직업훈련 체계 개편 + 40대 맞춤형 일자리 +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안전망

⑧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체감형 패키지

▶ 난임출산비 경감 + 일·가정 양립 + 은퇴인력 선순환 활용 + 고령친화형 스마트 돌봄

【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】

⑨ 감염병 대응 등 국민 생명 지키기 1+3 프로젝트

▶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 고도화 + 교통안전·산재방지·자살예방

⑩ 그린 플러스 프로젝트

▶ 기후변화 대비 대기·물·폐기물 분야 선도 프로젝트 + 녹색 벤처기업 육성

2

재정혁신 전략

◇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·부가가치 제고
⇒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

[전략 1]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

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

- 중기 재정수요 전망*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의 확실한 성과도출을 뒷받침하도록 지출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설정
 - * 대내외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재정수요 분석, 주요 선진국과의 지출구조 비교 등
- 각 부처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소관 부문간 및 부문내 재원배분계획(중점/현행유지/감축)을 작성·제출
 -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구체화하여 반영
 - * (예: 환경분야) 높은 하수도 보급률 감안 '하수도 투자 부문'을 구조조정 예산절감
→ '먹는물 관리'(동일부문), '녹색산업·친환경차'(타 부문) 등 중점 투자부문으로 전환

② 재량지출 10% 의무적 구조조정

- 각 부처는 필수소요(법정경비·인건비 등)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%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
 -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·페널티 부여 (기본경비 증·감액 등)
 -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 추진
- 구조조정 예산액은 부처별 재원배분계획상 중점 투자 분야의 신규·정책사업 소요로 전환

③ 보조금·출연금·출자금 전면 정비

- (보조금)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 보조사업*의 존속 필요성·보조율·적정예산 등을 원점(zero-base)에서 검토

*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(의무지출 등 제외)을 대상으로 검토

→ 사업 폐지·통폐합, 존속기간 상한설정, 보조율 전면 조정

< 정비 원칙 >

- ▶ 사업목적 달성, 성과부진, 유사중복 사업 등은 폐지·통폐합
- ▶ 재량적 보조사업(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)의 존속기간 상한(최장 6년) 설정*
 - * 「보조사업 연장평가」를 1회만 허용하고, 기간종료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「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」 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
- ▶ 적정수준의 자부담 등을 전제로 보조율 개편, 집행실적·사업성과 등에 근거하여 예산규모 조정

- (출연금)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의 법적근거,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존속여부 및 적정소요 검토

-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기관의 고유기능이 아닌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, 정책적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으로 전환

- (출자금) 출자사업별 실적·성과·회수재원 이력관리 강화

-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·출연은 집행실적·목표달성도*를 분석한 평가서 및 미집행금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예산요구

* (예) 출자사업 대출 손실률, 보증사업 대위변제율 등에 대한 예측치 및 실적치를 비교분석

-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5개년 투자회수금 흐름 추정 및 재투자 계획서를 포함하여 적정한 신규 출자 예산 요구

* (예) 자펀드 청산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 우선 활용을 전제로 신규 출자소요 최소화

[전략 2] 지속가능 기반 확충

④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

- (국세)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, 탈루소득 과세 강화,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 확충 노력 강화
- (세외수입) 세외수입원별로 계량적 분석에 기반한 수입 추계서를 작성·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차년도 수입 계상
 - 유희 국유재산 개발·활용,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확충 방안 적극 발굴
- (민간투자재원) 재정사업 추진시와 비교해 국고부담 경감과 운영효율 제고 등이 기대되는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
 - 수익성이 확보되거나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한 사회기반 시설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
 - 민자사업 대상 확대(열거주의→포괄주의), 혼합형(BTO+BTL) 도입 등 제도개선을 활용한 신규 사업발굴, 신규 추진방식 적극 추진
 -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BTL로 추진할 경우, 투자 계획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청
- (정부재원의 효율적 배분) 회계·기금간 칸막이식 운영 해소 및 여유재원 활용 극대화
 - 유사기금 통합*, 특별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 조정** 및 사업이관
 - * (예) 방송통신발전기금 + 정보통신진흥기금 →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
 - ** (예) 문화예술진흥·국민체육진흥·관광진흥개발 기금간 여유재원 과부족을 조정
 - 기금별 여유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최대한 확대

⑤ 집행실적·성과 기반 예산 편성

- 연례적 이월·불용 사업은 집행부진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,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삭감하여 요구
 - * 집행을 70% 미만 사업, 국회·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업 중점 검토
- 집행가능성 체크리스트[양식 11]를 활용하여 집행부진 해소 여부를 자체 점검
-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요구시 집행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드시 포함
- 보조사업 적격성·연장평가, 재정사업자율평가, 핵심사업평가 등의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 요구
 - 재정사업심층평가(4개 과제*)를 조기에 완료하여 예산편성에 반영
 - * 국립대 재정지원, 노인의료 지원, 전자정부 지원체계, 스마트 시티 사업모델
-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관리체제로 개편하기 위해, '21년 예산부터 프로그램별 성과목표·지표를 시범 개발·운영
 - * '20년에는 '2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성과목표관리 시범운영 실시(시범운영기간 중에는 기존 성과계획서 작성 병행), '22회계연도부터 본격 전환

⑥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

- (수요자 중심 개편) 공급기관 중심으로 분절된 사회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·통합하고 중복사업 해소 등을 병행하여 예산 요구
 - * (예) 노인돌봄기본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 사업을 1개의 '노인맞춤돌봄서비스'로 통합·개편
- (사업수행절차 단축) 부처에서 최종 수요자에까지 이르는 사업수행절차를 축소하고 사업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예산 요구
- (지역별 중복방지) 지역기반 인프라 시설은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지역별 배치계획* 검토 후 예산 요구
 - * (예) R&D·산업·기업 지원센터, 각종 전시·공연·체험시설 등을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배치·운영

⑦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

-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 검토
-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방안 마련 추진
 - 적립금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(해외·대체투자 확대), 유망 부대 사업 발굴 등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·시행
 - 사회보험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, 사전 부정수급 방지·사후환수 강화 등 지출효율화 추진

[전략 3] 혁신적 재정운용 틀 확립

⑧ 협업예산 편성·관리 제도화

- 다부처 연계·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, 공동 사업기획·요구·집행·평가 등 전체 사업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

< 협업과제 유형 예시 >

① 사업주기별 연계지원

* 소재·부품·장비 국산화 : R&D^{과기·산업부} + 사업화^{산업·중기부} + 양산자금^{금융위}

② 지원대상 중심 융합지원

* 산업단지 고도화 : 공장·산단 스마트화^{산업·중기부} + 산단 환경개선^{국토·산업부} + 창업·교육·여가 인프라 조성^{중기·교육·문체부 등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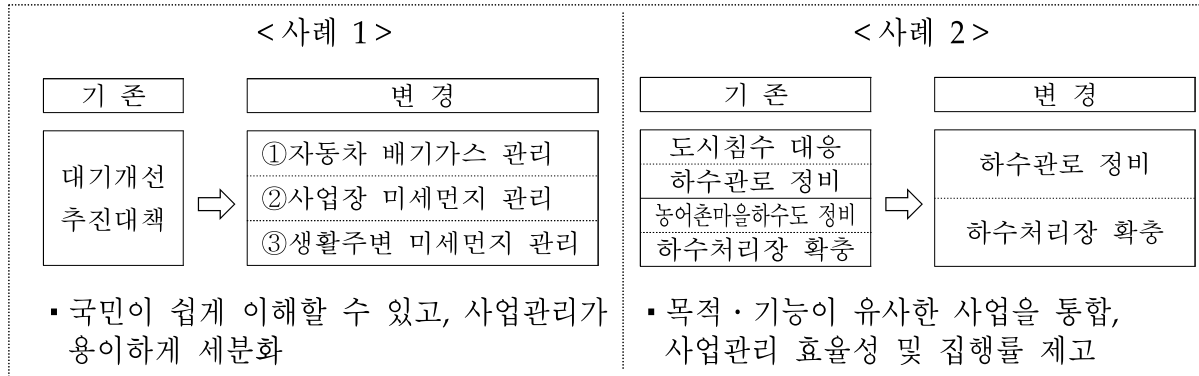
③ 부처간 효율적 역할 분담

* 교통안전 : 국토^{국토부} + 지방도^{행안부} + 홍보단속^{경찰청} + 유·초·중·고 안전교육^{교육부}

- 사업군별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, 공동 사업기획·집행·평가 방안*을 마련하고 예산실 협의를 거쳐 패키지로 예산 요구
 - * (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&D 사업) 산업부·과기부가 각각 개별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관리·집행하는 대신 공동사업단을 설치하여 통합 관리
- 협업예산에 포함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

⑨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예산사업 분류 및 비목 체계 개편

- 사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맞춰,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, 부처의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업 분류체계 개편
 - 예산 요구 전까지 각 부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



-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디자인·설계·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분야의 비목 체계 정비*
 - * 토목·공사 설계비를 공종별로 세분화하고,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공 건축물의 개념설계·디자인 관련 신규 비목내역 도입 등
- 재정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주체를 선정하고, 이에 맞는 예산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요구
 - * (예) 민간 이전지출 사업(보조·출연 등) 중 부처의 책임하에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정부직접사업 비목(자산취득비·용역비 등)으로 전환

⑩ 사회적가치 구현 및 국민참여와 소통 내실화

- 각 부처는 안전, 인권증진, 사회통합, 사회적경제 활성화, 환경 지속 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제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요구
- 각 부처는 국민 참여예산 제안에 대해 제안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사업을 적극 설계하여 요구
-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수요자·지자체·전문가 등의 참여를 적극 확대
 -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재정운용방향, 전략적 재원배분, 주요 재정현안 등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성화
 - 지방재정협의회를 지자체별 지역발전계획과 국고지원을 연계하고 지자체간 투자 중복 등을 조율하는 협의 장으로 운영

(1) 보건·복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저소득·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포용국가 체감 제고
 -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및 한부모·다문화 가정, 1인가구, 여성·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
 - 고령자·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,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인상 지급대상을 확대
 - 자활근로·사회서비스일자리·노인일자리 등을 지속 확충하여 근로기반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지원
- ☐ 국공립·직장어린이집 확충, 온종일돌봄 구축,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, 청년·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택공급 등 저출산 대응 투자 확대
- ☐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산업 혁신생태계 구축
 -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·육성 및 의료인력 확보, 응급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보강
 - 감염병 등 건강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관리시스템 고도화, 진단시약·백신·치료제 개발을 위한 R&D 집중 투자
 - 보건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·네트워크·인공지능(DNA) 기반 구축 및 시장개척 지원 등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
- ☐ 국가유공자 보상 및 의료 지원 등 보훈복지 지원 강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유사·중복을 조정하여 복지지출 효율화
- ☐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, 적정 보험급여 관리,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 추진

〈 일자리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산업구조변화 대응 및 40대 고용창출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,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심 고용안전망 확립
 -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체계적·전략적으로 관리하고, 산업분야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
 -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40대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, 창업, 미스매치 완화 등 종합적 지원 강화
 -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고, 플랫폼 노동자·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고용서비스 강화
- ☐ 취업 취약계층별 애로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 - (청년) 청년추가고용장려금(고용), 청년내일채움공제(자산형성)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
 - (노인)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, 공공·사회서비스·시장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
 - (여성) 직장어린이집 확충, 유연근무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, 남성 육아휴직 증가를 반영한 육아휴직급여 확대
 - (장애인) 중증장애인 직접일자리 확대,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및 장애인 근로지원 인프라(근로지원인 등) 확충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 본격 추진, 사업별 “최소 성과 기준*” 도입을 통해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강화
 - * 취약계층 참여비율, 반복참여율 등
 -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“핵심사업” 위주로 재투자하여 일자리예산의 성과 제고
- ☐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신설·변경시 고용부 사전 협의(‘19.4월 의무화)를 통해 기획단계 부터 유사·중복 방지

[2] 교육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학령·지역인구 감소,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
 -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 사업 지원을 확대
 - '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하여 대학자율혁신을 지원하고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대학관리방안 마련
 - 초·중·고등학교의 AI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신산업·유망산업과 연계되는 실용적인 교육·연구 기반 확립
- ☐ 전 연령대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, 다양한 직종·연령·계층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
 - 만 3~5세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
 - 고졸 취업·후학습 지원 강화로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고 국가장학금 지원, 행복기숙사 확충 등 대학생 교육·주거비 경감
 - 제조업·40대 취업자 감소세에 대응한 대학 내 단기·전문 학습과정을 다양화하고 장기구직자·실직자의 취업교육을 강화
 - 성인학습자를 위한 비학위과정, K-MOOC 등 온라인강좌를 확대하여 '일-학습-삶 연계'를 강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대학재정 지원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, 사업 간 연계·조정* 방안 마련
 - * (예) 국립대학 육성·대학혁신지원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간 조정
- 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을 편성하고, 지역교육 및 혁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강화

[3]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新한류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, 외래객 체감형 지역관광 활성화,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
 - 한류 장르 다변화 및 마케팅 강화, 신남방 지역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新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
 - 외래객이 지방공항으로 입국해 지역內 관광정보·교통·콘텐츠 등을 연계·제공받는 '코리아 토탈관광패키지' 개발 지원
 - 관광거점도시 등 글로벌 관광지 육성, 관광벤처 발굴, 관광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으로 외래객 지역분산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- ☐ 생활체감형 콘텐츠 개발·확산 등을 통한 지역문화 외연 확장 및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
 - 5G연계 실감콘텐츠 등 미래융복합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·해외 확산, 모험투자펀드 출자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
 - 유·무형 문화재에 AR·VR 등 실감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·보급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활용 확산
- ☐ 문화·체육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및 예술창작여건 지원, 국제대회 유치로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
 - 취약계층 문화·체육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, 문화·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촘촘한 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
 - 예술인 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창작안전망 조성
 - 2024동계청소년올림픽, 2032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·준비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소액다건형 문화분야 보조사업의 복잡한 과목구조 개편·단순화 및 복잡다기한 지역전달체계 일원화·체계화 추진
- ☐ 문화·체육·관광 기금간 칸막이 제거 및 탄력적 여유재원 활용

[4] 환경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기후변화·환경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산업 혁신기반 조성
 - 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
 - 대기·물·폐기물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·추진하고, 환경 新기술 R&D-실증·사업화 지원 확대
 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취약 지역·계층의 기후변화 (예: 이상기후, 홍수 등) 적응을 위한 투자 확대
- 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, 대기측정망, 첨단 감시장비 등 과학적 정책기반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
 - 산업·수송·생활 분야 핵심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집중 지원하고, 대기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장 규제이행 지원 확대
 - 과학적이고 촘촘한 측정·감시망을 확대하고, 국외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구체화
 - 계절관리제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
- ☐ 생태계 자연성 회복, 순환경제 촉진 등 지속가능성 강화
 - 국토 생태축 복원, 생물다양성 확보 등 자연성 회복 투자 확대
 - 폐기물 감량,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성 제고 및 하천·해양 쓰레기 수거·처리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수질개선시설 등 환경인프라 투자 패러다임을 신·증설에서 안전·개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정효율성 제고
- ☐ 전기·수소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성능·환경 중심으로 개편
- ☐ 미세먼지·물관리 분야의 복잡한 재정구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·체계화하고, 유사사업 통폐합 등 재정효율성 제고

(5)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, 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
 - 스마트공장·산단 등 제조현장 스마트화, 융복합화·친환경화 및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품목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
 - 시스템반도체·미래차·바이오 등 핵심산업 및 유망 신산업에 대한 R&D, 사업화, 인력양성 등 집중지원 추진
- ☐ 혁신성장의 총체적 확산을 위해 벤처·창업 지원 강화
 - 신산업분야 기술창업·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단계별로 사업화를 지원하고, 창업초기기업 중심 펀드·융자 등 자금공급
 - 유망 창업·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&D·사업화·자금 패키지 지원 등 스케일업 방안 강구
- ☐ 자영업자의 자동화·스마트화를 지원하는 한편, 준비된 창업과 실패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지속 제고
- ☐ 수소경제 지원,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, 에너지 분야 안전 투자 등을 확대
- 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, 기업 유턴 촉진을 지원하고, 규제자유특구, 산업단지 고도화 등 지역혁신역량 제고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미래신산업 육성, 산업단지, 수출, 창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부처간 협업·분업을 강화
- 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및 원칙 등을 마련

(6) SOC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IoT,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·주거 인프라 구축 확대
 - ITS, 감응신호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대폭 확산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C-ITS 시범사업 등 집중 투자
 -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드론·스마트시티·수소도시 등 차세대 교통·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
- 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, 운수·항공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 경쟁력 제고 및 체질개선 지원
 -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, 도시재생뉴딜·노후산단 개조 등 노후지역 재생 및 혁신 유도
- 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, 생활SOC 확충 및 기반시설 노후화 대응 선제적 안전 투자 확대
 - 광역·혼잡도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, 수도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 지속 투자로 출퇴근 시간 단축
 - 위험도로 개선, 철도 노후시설 개량, 하천유지보수, 노후 항만 시설 개량 등 국민 실생활 밀착형 안전투자를 확대

2. 지출효율화 계획

- ☐ 보상 등의 문제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을 조정하고, 장기간 착수가 지연된 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
- ☐ 도로, 철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시 수익자부담,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원칙에 입각해 정부, 지자체, 민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

[7] 농림수산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농업·농촌 공익직불제 정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
 - 중·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환경·생태·먹거리 안정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·농촌 공익증진 직불제 안착
 -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·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사각지대 보완
- 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어업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시장 확대
 - 스마트 팜 혁신밸리,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농어업 스마트화 촉진
 - 신남방 스타품목 수출 확대 및 신북방 스마트 팜 플랜트 수출 지원 등 농어업의 세계시장 공략 지원
- ☐ 농·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
 - 경쟁력 있는 청년 농·어업인 육성을 위해 진입·정착·성장 단계별 교육, 자금, 컨설팅, 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농촌형 생활 SOC 확충, 어촌뉴딜 300 등으로 농산어촌 정주·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
- ☐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국내 농수산물 수요기반 확대
 - 농가 소득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수급예측 고도화 및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
 -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, 로컬푸드 확산 등 소비 활성화 유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이행점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유사·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
- ☐ 농업생산 기반시설 신규 조성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 성과창출, 재해대응 역량 강화 중심으로 내실화

(8) R&D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신시장을 선도할 신기술·신산업 투자를 통해 R&D 성과 창출
 -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D.N.A.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, BIG 3(미래차,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) 고도화 분야에 중점투자
 - 수소경제, 에너지신산업,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투자 확대
 - 신성장 서비스 창출,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, 제조업-서비스업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R&D 투자
- ☐ 주력산업 활력 회복 및 재도약을 위한 혁신투자 확대
 -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품목 기술개발, 기업 맞춤형 실증·양산 Test-bed 구축 등 지속 확대
 -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, 융복합화 및 친환경화 투자 강화
- ☐ 실전형 혁신인재 양성 및 생산적 R&D를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
 - 기업·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AI 등 신기술·신산업 분야 실무 인력 양성 확대 및 고도화
 - R&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응용기술 상용화·융복합화 R&D 및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, 고위험 과제 등에 투자 확대
- ☐ 재해·재난 예방, 미세먼지 저감 및 감염병 예방과 백신개발 등 국민안전을 위한 R&D에 투자 강화

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☐ 부처 간 R&D 성과물의 공동활용, 예산집행의 유기적 연계 등 투자 효율화를 위한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
- ☐ 초대형 신규 R&D 사업의 과학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추진*
 - * 예) 일정규모 이상의 초대형 사업은 조사기간을 충분히 보장
- ☐ 신규 지역R&D센터는 기존 인프라와의 유사·중복, 지역 주력 산업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하여 지원여부 결정
 - * 신규센터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 객관적 사전절차 마련

(9) 국방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·도입에 집중 투자하고, 전력무기 가동률 극대화를 위해 군수지원 강화
 - 핵·WMD(대량살상무기) 대응전력 보강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
 - 신규 전력화 무기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교육·훈련,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 강화
- 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 육성에 집중 투자
 - 미래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무인전투체계 확보와 핵심기술 개발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
 - 가상·증강현실을 적용한 실전형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무인 경계체계 확대 지원
- ☐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
 - 자격증·학점취득·외국어학습 등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하여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취업활동 지원
 - 빅데이터·AI 등을 활용하여 급식·의료서비스 등 개선
- ☐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방 R&D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
 - 민·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무기체계 국산화 및 국방 R&D 역량을 강화하고, 방산벤처기업 육성으로 방위산업 수출기반 조성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국방개혁 2.0에 따른 병 감축과 연계하여 병 인건비, 급식·피복·군수 등 전력운영비 효율화
- ☐ 도심내 유휴 군부지를 혁신성장공간·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민간위탁 개발하여 자산가치를 제고하고 매각 활성화를 통해 세입재원 확충
- ☐ 국방 R&D 전반에 민군겸용성 검토를 확대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등 총사업비 관리 강화

[10] 외교 · 통일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적극적인 글로벌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 강화 도모
 - 기후변화, 평화유지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*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지속 등 다자외교 강화
 - * '21.4월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국내 개최예정
 -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, 민간투자와 ODA의 융합·연계 등 전략적 ODA 시행으로 국제사회 기여 및 국익증진 확대
- ☐ 재외국민 보호·안전 인프라 확충 및 재외동포 권익 신장·네트워크 강화
 - 지진, 테러, 전염병 등 해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물품*에 대한 지원 확대
 - * 공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구비중인 생필품 및 안전 물품 지원 확대
 - 한글학교, 차세대 육성 등 재외동포 지원을 통해 전세계 한인 네트워크 및 모국과의 연계성 강화
- ☐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
 - DMZ 및 주변지역의 평화적 이용, 남북 철도·도로 연결 등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
 -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
 - 이산가족 상봉, 인도적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국내 안정적 정착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력 강화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각 부처 수행 공공외교 사업 중 유사·중복, 부진 사업을 정비하고, 외교부 사전협의·조정기능 강화
- ☐ 재외공관 행정직원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관별 행정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

[11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사회적 가치 강조 및 디지털 전환 반영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 가시화
 - 민간의 우수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과 결합하여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
 - 마이데이터* 활성화,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산업 견인
- *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본인이 직접 활용하도록 지원
- ☐ 포용적 사회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
 - 외국인 주민,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류·참여 프로그램 활성화
 - 저성장 및 인구감소 지역 등에 대한 청년일자리 사업·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
- ☐ 과거사 진실규명 및 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, 위령사업을 확대하여 명예회복 지원
- ☐ 과세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해 세원관리 역량을 제고하고,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
- ☐ 마약·방사능 오염물질 등 불법·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첨단 수출입통관 및 감시체계 구축
- ☐ 미래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스크 등 필수 보건 비축물자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전략적 확보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지자체가 안전, 환경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
- ☐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민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, 장기계속계약 확대로 연례적 예산 이월 방지

[12]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국민안심 사회 실현 위해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역량 강화
 - 경찰인력 증원, 스마트 치안 구현 및 주민밀착형 치안활동 등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등 지속 확대
 - 특정범죄자, 보호관찰 대상 등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, 정신 질환자 치료 확대 등 범죄예방시스템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
- ☐ 범죄피해자·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및 법적지원 확대
 -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, 강력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·지원 확대
 - 이민자 사회통합 및 사회적응 지원, 교정시설 수용환경 개선 및 취업지원 확대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강화
- ☐ 재해·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
 -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여 침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하고, 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전성 보강
 - 대형·복합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인력 충원, 장비 확충 등을 차질없이 지원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공수처 신설, 검·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분야 간 예산 조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- ☐ 소방청·해양경찰청 장비 교체·보강시 실제 사용빈도·내구도·유관 기관 장비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도입 기준 마련

〈 안전투자 〉

1. 중점 투자방향

- ☐ 국민 안전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활안전 투자 확대
 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, 산업재해 방지시설 보강,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투자 강화
 - 노후 경유차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투자 확대 및 전통시장,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 지속 추진
- ☐ 신종·복합재난 및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예방투자 확대
 - 해외 신종 감염병,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, 확산 방지를 위한 인력·시설·장비 보강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 지원
 - 태풍,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, 붕괴사고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지역 정비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확대
 - 시설물 내진보강 투자 강화 및 지진 경보시간 단축 등 신속 대응 경보시스템 개선 지원
- 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투자 확충 및 안전정보 공개 확대
 - 도로·철도 등 노후 교통 SOC에 대한 안전 보강을 강화하고 댐·하천 등 노후 방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 적극 지원
 -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 위협요인을 조기 해소하고,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추진

2. 지출 효율화 계획

- ☐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및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재해예방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투자 축소
- ☐ 주택·온실·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피해시 실손 보상 지원 및 재난지원금 경감 추진

제2편

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◇ 「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상 별도 열거되지
아니한 사항은 「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」을 준용

① (경제여건) 내년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, 불확실성도 상존

※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

② (수입여건) 사회보험료를 중심으로 전체 수입은 증가세 지속

-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입자 확대,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지속 증가 예상
- 사업성기금은 주파수 재할당 경매수입 등 법정부담금, 융자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

③ (지출여건)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복지·고용안전망 확충,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소요 증가

- 공적연금급여 증가,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
-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 주거복지 강화, 중소벤처분야 창업·혁신성장 지원 등 사업성기금 지출도 증가 예상

④ (기금수지) 전체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나, 흑자폭은 감소

- 사회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체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나,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, 사업성기금 지출 확대로 흑자폭은 감소

Ⅱ

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1

기금운용 기본방향

-
- ① 포용가치 확산, 혁신투자 가속화·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,
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
-
- 베이비부머세대 본격 은퇴에 따른 안정적인 공적연금 보장,
구직급여·직업훈련, 산업재해 예방 등 핵심 소득·고용 안전망 강화
 - 장애인·여성·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·고용·
복지 확충으로 포용가치 확산
 - DNA 플랫폼(데이터·AI·5G)을 통한 융합 촉진, 유망 신산업 투자
강화로 혁신투자를 가속화하고,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강화,
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반 구축
 -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,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, 체육·
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등으로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
-
- ② 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,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
-
- 사회보험성 기금은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,
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관리 강화
 - 사업성 기금은 자체수입 증대, 유사·중복 사업 정비 등
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등의 의존재원 최소화
 - 재원이 부족한 유사 기금에 재원 전출,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
통해 기금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

① 사회보험성 기금

- (핵심 안전망 강화)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,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, 산재 예방·보험 지원 확대 등에 중점
 - (연금기금)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안정적인 연금급여 지급으로 노후소득 보장
 - (고용보험기금) 신기술분야 위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, 구직급여·일터혁신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
 - (산재보험기금)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, 산재병원 등 재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율 제고

② 사업성 기금

- (경제활력 제고) 유망 신산업 육성 등 혁신투자를 가속화하고, 중소벤처 생태계 강화,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
 - (정보통신·방송발전기금)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, DNA (Data, Network, AI)와 기존 산업간 융합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
 - (중소기업진흥기금)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, 신시장 진출, 재도약 지원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촘촘한 정책자금 지원
 - (전력기금)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기차 보급 확대, 수소·연료전지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R&D 강화

- (산업기술촉진기금) 기술성과 활용 촉진,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 개발을 통해 업계 애로에 적시 대응하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
 - (대외경제협력기금) 신남방·신북방정책에 부합하고, 야국기업 비교 우위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개발협력사업 발굴·추진
 - (소상공인진흥기금)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 재기를 돕기 위해 스마트 상점 등 신기술 도입 및 재취업·재창업 지원 확대
 - (관광기금)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, 관광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구축
 - (농산물가격안정기금) 식품·외식산업의 신성장산업화 및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- (포용가치 확산)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·고용·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, 사회적 약자의 자립·자활·피해구제 등 사회복지 지원
- (주택도시기금)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 통합형 주거 사다리 마련, 주택 구입·전세자금 저리융자로 주거복지 강화
 - (임금채권보장기금)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 체불근로자의 생계 유지 강화, 지급절차 간소화·재직자 체당금 등 제도개선 추진
 - (장애인고용촉진기금) 근로지원인·고용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 유지 지원,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
 - (양성평등기금) 한부모 가족의 양육여건 개선, 가정폭력·성매매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피해 구제·자립·자활 지원
 - (청소년육성기금)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인프라 지원, 위기 상황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

- (안전·삶의 질)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,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, 체육·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
- (건강증진기금)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, 자살예방·예방접종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마련
- (방사성폐기물기금) 2, 3단계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,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술조사 등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
- (축산발전기금) 가축분뇨, 악취 등 축산으로 인한 오염을 저감하고,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품질관리 지원
- (범죄피해자보호기금) 범죄피해구조금, 치료비, 생계비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
- (자동차사고지원기금) 무보험·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구제 강화, 피해자·가족 특성에 맞는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
- (국민체육기금) 주민밀착형 체육시설 확충,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등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지원
- (문화예술기금) 현장수요 기반 창작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,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

③ 금융성·계정성 기금

- (경제활력 제고) 중소·중견·수출기업,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보험·보증을 충분히 공급하여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
- (신·기반기금)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, 소재·부품·장비 등 유망산업분야 중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

- (무역보험기금) 新시장 수주 지원으로 무역영토 확대, 2차 전지·5G 네트워크 등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산업 선점 중점 지원
 - (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) 농어업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농어가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, 스마트팜 등 신성장분야 보증 확대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
 - (산업기반기금) 신규 건설, 자금 재구조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공급으로 재정절감 및 경제활력 제고
- (포용가치 확산) 서민 주거안정 및 노후 실질소득 보장,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 강화
- (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) 청년 전·월세보증 확대 등 서민·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,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실질소득 확대
 - (복권기금) 저소득층 장학사업, 서민금융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·자활 지원 강화 등

① 사회보험성 기금

-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여 재정위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,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관리시스템 고도화
- 가입률 제고, 급여 누수 방지,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기금 적자와 국고보전규모 최소화

② 사업성 기금

- 유사·중복 기금은 통폐합을 검토하고, 기금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기금간 재원 공유 등 관리 효율화
- 만성 적자 기금은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, 유사중복사업 통폐합, 기금존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출 구조조정
- 여유자금 과다 기금은 기금으로 추진 가능한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,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 축소·폐지, 기존에 지원받았던 회계로 전출,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확대 등 추진

③ 금융성·계정성 기금

- 보증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대위변제 축소, 구상채권 회수 확대를 통한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
- 여유자금의 투자 자산 다변화, 투자 일임 등 전문성 강화로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 추진
- 특별회계·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